

검·경·법의 칼날 주목...요동치는 지방정치권

단체장들 비리·직계가족 범행 등 판결 따라 당선 무효·출마 불가능 수사 결과·법원 판단에 이목 집중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방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할 수 있는 데 따라 '검·경, 법원 주도 선거'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인규 나주시장 아들 A씨와 측근 B씨를 5일 구속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흉상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265조)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광주·전남 단체장들 운명은?
강인규 나주시장 아들·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상의 합평군수 옷값 뇌물 의혹 소환조사 거쳐 이달 검찰 송치
이승옥 강진군수 설 선물 수사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일정 기간 박탈된다.

강 시장 아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나주시장 선거 향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강 시장의 3선 구도 및 경쟁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자칫 수사 결과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상의 합평 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군수는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10월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지난해 11월 한 차

레 소환조사를 거쳐 이달중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붙여 송치할 예정이다. 검·경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받으면서 선거에 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검·경 주도 선거'라는 말도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얘기다.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여태껏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 군수는 지역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이달 내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모두 선거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데다, 다가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허석 순천시장은 경우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는데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1년6개월)을 구형받고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경우 최종 판단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 순천시장 선거도 법원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재판 결과도 선거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 구청장도 최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질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지역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자치단체장 인사 뿐 아니라 광주·전남의 기초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어서 후보자들 사이에 관심사다. 강진·담양·신안·화순·함평 등 기초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에 송치됐고 일부의 경우 법원 재판이 열리고 있어 지역민들의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은 혈액암 등 건강사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마를 선언을 했으며 오는 제 8회 지방선거(6월 1일)에서는 광주의 경우 광주시장과 광주 시교육감, 구청장 5명, 지방의원 91명(광역 23명·기초 68명·비례대표 포함)을, 전남에서는 전남도 지사와 전남도교육감, 시장·군수 22명, 지방의원 301명(광역 58명, 기초 243명·비례대표 포함)을 선출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산단 화재사고 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화재사고(광주일보 12월 14일 6면) 관련, 업체 대표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6일 안전조치·안전교육 준수 여부와 관련해 이일산업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이일산업 관계자 6명과 하청업체인 B플랜트 대표 2명 등 8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하청업체에 고용돼 작업 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발주업체 대표인 A씨가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수사중으로, 앞서 광주고용청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모두 38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노동청은 조만간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재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물학대 신고 소극 대응” 경찰서 지구대 고발키로

경찰이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단체는 해당 경찰서 지구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한 건강원 앞에 세워둔 트럭 적재함 속 철창에 갇혀 2마리가 갇혀있어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방림지구대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동물단체 관계자로, 해당 건강원이 개들을 신고 도살장으로 보낸다는 제보가 잇따랐던 집, 트럭 적재함 속 뜬장(사육하는 개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을 뚫고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철창)에 갇혀 지가 갇혀있는 점을 들어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철창에 갇혀있는 차량 소유주에 연락을 취했지만 “먹는 게 아니라 농장에서 키울 개”라고 답변한데다, 두꺼운 천으로 철창이 덮여 있어 추운 겨울철 날씨에 어느정도 보온성을 갖춰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신고자는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동물학대는 아니고 개 운송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 빈판 위에 갇혀있는 묶어 놓은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동물복지에 둔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동물단체 등은 해당 건강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림지구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호남·제주지역 노동자

10명 중 7명 체불임금 받았다

호남과 제주지역 노동자 중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10명 중 7명이 체불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고소·고발 건수 2만 8434건 중 2만1438건(75.4%)이 구제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임금체불 권리구제율은 전년도 69.4%에 비해 6.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체 권리구제자 중 1만7112명(79.8%)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대지급금(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이나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해결한 경우도 4326명(20.2%)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1일로 전년(44일)에 비해 13.2% 감소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대지급금 지급, 법률구조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대해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라봉 수확 한창

6일 나주시 송촌동 시설하우스에서 한라봉 수확이 한창이다. 나주에서 재배된 ‘친환경 나주 한라봉’은 풍부한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3kg 한상자에 2만5000원에서 2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